

삼성·SK 메가 투자... 李, 호남 반도체클러스터 청사진 제시

오늘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수도권 집중 완화, 균형발전 추진 이재용·최태원 회장 만나 협력 논의 호남 반도체 특혜론에는 직접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참석하는데, 최근 주목받고 있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관련 투자 발표가 예상된다. 이런 와중에 이 대통령은 주말 동안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두고 야당의 공세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28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민보고회를 주재하고,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분야 민관 합동 프로젝트를 공개한다. 행사에선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의 3대 메가프로젝트 정책 발표가 있고, 이후 삼성과 SK의 투자 계획이 발표된다.

이는 국토 공간 재편과 국가 균형발전,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축이 돼 전문학적인 규모의 자금 투입이 발표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행사를 앞두고 주요 기업 총수들과 연이어 만나며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과 25일 각각 최태원·이재용 회장과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특히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첨단 핵심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영남이나 충청, 강원, 제주, 호남 등으로 확대하는 획기적인 전략 산업 다극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그 전날(24일) 관훈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공식화하며 "용인에 짓기로 한 것을 짓지 않고 지방으로 간다는 차원은 절대 아니다.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 삼성그룹이 1000조원대의 투자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김 정책실장은 지난 26일 한 방송에서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나오는 숫자들이 매우 낮설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발표를 앞둔 주말 동안 정치권에서는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대해 비판이 나왔다. 특히 국민의힘이 '외압·직권남용' 의혹까지 제기하자, 이 대통령은 직접 여러 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며 반박에 나섰다.

이날에도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호남에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라며 "반도체 호남 입지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되,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협조해 주시고,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 갈라치기나 지역 갈등 조장은 자

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의 대대적 지원 속에 관련 기업의 결단으로 가장 합리적인 반도체 산업 중심지를 추가 조성하는 것"이라며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뤘고, 뿌리 깊은 지방 차별과 영·호남 갈등을 완화할 국가적 대의(大義)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대기업들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에 대해 "이 일은 정확히 말하면 정부의 용수, 전력, 용지, 인프라, 인력양성, 정주여건 구축 등 기업환경 조성과 공직자들의 설득·요청에 따라 CEO들이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글에서는 "국가정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기업들 팔목 비틀어 강요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일도 그렇게 보일 수 있다"면서 "대한민국 생존전략이 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행정 목표 달성을 위해 공직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다한 결과다. 전무후무한 초대규모 지역투자 유치라는 역사적 성과는 칭찬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국회 원 구성 교착 장기화... 법사위원장 두고 여야 강대강 대치

오늘 각각 의총 열고 대응 방안 논의 민주, 상임위 배분 단독 처리 가능성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3주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면서 개점휴업 중이다. 결국 더불어 민주당이 조만간 단독으로 상임위원회 배분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9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5일 선출된 지 3주가 넘었지만, 여야는 여전히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최대 쟁점은 이번에도 법사위원장이자, 민주당은 계속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 넘겨받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6일 만나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협상이 답보 상태에 머무르자 조 의장도 압박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선임 명단 제출 시한을 두 차례(24·26일) 넘기자, 국회의장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임위원 선임안을 임의로 작성해 공문으로 발송한 뒤, 29일 정오까지 의견을 달라고



조정식(가운데) 국회의장 주재로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한병도(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오른쪽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조 국회의장,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뉴시스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소통수석은 "국회법 48조와 45조에 따른 절차"라며 "명단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국민의힘에 의견을 진술할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조 의장의 공문을 보이면서 "이게 바로 독재"라며 "소수당을 무시하고 압박하고 자기들 마

음대로 국회를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저희는 응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29일 여야는 의원총회에서 대응 전략을 최종 점검할 전망이다. 협상이 끝내 타결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 배분을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민주당은 검찰개혁 후속 입법 등 현안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원

구성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계속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당시에도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18개 상임위 중 법사위·과방위 등 주요 상임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직을 가져갔고, 국민의힘은 상임위 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여야는 주말에도 법사위원장직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자신들의 몫이라 주장하지만, 국회법 어디에도 특정 상임위원장을 특정 정당 몫으로 정한 조항은 없다"며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 중 본회의 선거로 선출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이 위원장 자리를 얻기 위해 국회 전체를 불모로 잡을 수는 없다"며 "입법 독재"라는 선동 뒤에 숨지 말라. 법사위원장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즉각 원 구성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을 겨냥해 "원 구성에 관한 민주당의 새로운 제안이 없다면, 굳이 여당 원내지도부와 따로 만날 생각이 없다"면서 "2020년,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 권력을 독점했던 문재인 정부 말기의 오만과 독주가 그토록 그리웠느냐"고 비난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 의장의 상임위원 임의 배정에 "야당 의원 자리까지 손대는 입법 독재"라고 주장했다.

/서예진 기자

국힘 대안과미래, 장동혁에 재차 사퇴 촉구

"당·민심 직시하고 대표직 내려놔야"

국민의힘 의원 모임인 대안과미래가 28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6·3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대안과미래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장 대표) 당내의 건전한 비판에 대해 실명까지 거론하며 정계를 언급하는 편협한 리더십만 보일 뿐"이라고 말했다.

대안과미래는 "(장 대표) 6·3 지방선거 거둬 오른 당 지지율을 대표 공'으로 착각하고, 참정권 침해 문제의 해법은 '대표'가 갖고 있다고 착각한다"며 "수치로 보면 진 건 맞다"면서도 선거 패배의 책임은 대표가 아닌 개별 의원 탓이라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국민 상식에 반하는 언행을 반복하며 우리 당을 다수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 '강경보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안과미래 조찬 모임을 하고 있다. /뉴시스

수 세력의 놀이터'로 전락시켰다"며 "지금 장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는 스스로 약속

한 '원한에 부여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